

자료번호	A1-2013-0060
자료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조사, 2013 : 운영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목표관리제 관련 실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서 발주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과제를 맡게 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입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 목표관리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적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 순 진 올림

※ 이 조사는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문의 : 박사과정 원길연

■ 다음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시 업무 의사소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6번~9번)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귀 기관은 목표관리제 이행시 정부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귀 기관은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해서 어느 기관과 가장 활발하게 의사소통 하십니까? 가장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는 기관을 최대 세 개까지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최대 3곳이므로 의사소통하는 복수의 대상기관이 없을 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보기 항목들 중 최대 세 가지를 골라 맨 오른쪽 괄호 안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① 환경부 ()
- ②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 ③ 환경공단 ()
- ④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
- ⑤ 비영리 연구기관(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
- ⑥ 컨설팅 업체 ()
- ⑦ 관련 언론 매체(잡지, 신문, 방송 등) ()
- ⑧ 환경NGO(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
- ⑧ 대학 ()
- ⑨ 기 타()

8. 귀 기관은 목표관리제 이행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대상 기관들과 어떠한 사안으로 주로 의사소통 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기준배출량 조정
- ② 감축기법에 대한 자문
- ③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세부 작성 내용
- ④ 온실가스 관련 정보 공개 여부
- ⑤ 감축목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 ⑥ 기 타 ()

9. 목표관리제 운영시 정부(환경부)와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의사소통을 위한 회의체(포럼, 워크숍 등) 운영
- ②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정기교육 실시
- ③ 목표관리제 제도 이해를 위한 매뉴얼 작성
- ④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지양
- ⑤ 헬프데스크 운영 강화
- ⑥ 기술지원 확대
- ⑦ 기타()

Ⅲ.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 다음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10~12번)

10. 귀 기관이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가장 긍정적인 것부터 두 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 보기 항목들 중 두 가지를 골라 맨 오른쪽 괄호 안에 1순위, 2순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①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 ②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들의 에너지절약 인식이 높아졌다()
-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기관 구성원(기관장 제외)들의 에너지절약 인식이 높아졌다()
- ④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설치가 늘어났다()
- ⑤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 ⑥ 기관의 친환경 이미지가 제고되었다()
- ⑦ 복장이 자유로워짐으로써(예: 클-비즈) 기관 내 분위기가 유연해졌다()
- ⑧ 기타(_____)

11. 귀 기관이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가장 부정적인 것부터 두 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 보기 항목들 중 두 가지를 골라 맨 오른쪽 괄호 안에 1순위, 2순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①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부족으로 인해 기관 구성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졌다()
- ②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나쁜 인식이 형성되어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힘들어졌다()
- ③ 목표관리제의 목표 달성 방안이 다른 정책과 마찰을 일으켰다()
- ④ 이행계획서 입력 등 목표관리제 업무 추진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었다()
- ⑤ 여름철 자유 복장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번거롭다()
- ⑥ 냉난방 문제로 인해서 공공기관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⑦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워 다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 ⑧ 기타(_____)

12. 귀 기관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어떠한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
- ②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 ③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IV.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향후 운영방안

■ 다음은 목표관리제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3번)

13. 다음의 업무 관련 기관 중 목표관리제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두 개를 골라 순서대로 기재해주시오.

(※ 보기 항목들 중 두 가지를 골라 맨 오른쪽 괄호 안에 1순위, 2순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① 환경부 ()
- ②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 ③ 한국환경공단 ()
- ④ 내부 경영진(기관장) ()
- ⑤ 상급자(간부) ()
- ⑥ 노동조합 ()
- ⑦ 관련 언론 매체(잡지, 신문, 방송 등) ()

■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단에 대한 선호를 묻는 질문입니다. (14번)

14.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서 아래 나열한 정책들의 괄호 안에 귀 기관이 선호하는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① 탄소세 ()
- ② 목표관리제 ()
- ③ 배출권거래제 ()
- ④ 자발적 협약 ()

※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천이 되는 화석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단위 탄소 당 일정액의 세금을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배출원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단위 탄소 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실시된 제도로써 정부가 대규모 사업장(관리기업체)과 공공기관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에서 경제적 수단을 통한 감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시된 제도로써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들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발적 협약’은 기업, 사업장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방안, 정부지원 규모 등을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이다. 기업의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되고 효율적인 감축방안의 도출이 가능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효과적인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정부에서는 공공 목표관리제 감축목표 달성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공 탄소 상쇄제도 (off-set)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읍셋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전에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입니다. (13번-14번)

※ 탄소 상쇄제도(off-set): 공공기관의 '15년 온실가스 2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활동에 있어 행태개선 등을 통한 감축에는 한계가 있어 목표달성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공기관이 비규제부문(예, 사회복지시설 등에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에 감축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공공기관 감축실적으로 확보하는 제도

15. 공공 탄소상쇄제도가 시행된다면 공공 감축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④ 예산이 없는 공공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 ⑤ 기타 ()

16. 공공 탄소상쇄를 시행한다면 귀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용하겠다 ()
- ②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겠다 ()
- ③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활용이 어려울 것이다 ()
- ④ 자체적으로 감축이 가능해 활용이 필요치 않다 ()
- ⑤ 기타 ()

17. 귀 기관은 공공 탄소상쇄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떠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층 가구
- ② 사회복지시설
- ③ 타 공공기관
- ④ 기타

18. 귀 기관은 공공 탄소상쇄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시겠습니까?

- ① 직원의 자전거 이용 출퇴근 실시
- ② 공공장소에 나무식재(조림)
- ③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 ④ LED 조명 교체
- ⑤ 고효율 난방시설 교체
- ⑥ 건물의 단열강화
- ⑦ 기타()

■ 다음은 목표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19번-25번)

19. 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목표관리제 상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상기관 예산지원 확대
- ② 상쇄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
- ③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 합리화
- ④ 목표관리제 운영과정의 단순화
- ⑤ 목표관리제에 대한 정부, 기관의 실무자들의 이해도 개선
- ⑥ 정부와 기관 간 의사소통 방식 개선
- ⑦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목표치 산정 방식 개선
- ⑧ 목표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 ⑨ 정부의 정책 의지 강화
- ⑩ 기타 ()

20. 향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관리업체를 확대할 경우, 그 초기 단계에 있어서 다음 중 어떠한 방식의 이행 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무보고제란 의무적인 감축목표를 산정해서 발생하는 법적 강제사항 없이 배출량 통계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먼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한 후, 6개월 후 의무제도로 변경
- ② 먼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한 후, 1년 후 의무제도로 변경
- ③ 먼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한 후, 2년 후 의무제도로 변경
- ④ 먼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한 후 대상 업체와 협의하여 의무제도로 변경
- ⑤ 현행 목표관리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인 목표 설정 및 이행 관리 제도를 바로 실시
- ⑥ 기 타 ()

21. 목표관리제를 유지할 때, 상벌제 개선방안으로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수준의 패널티가 적절하다.
- ② 목표 미달성 단계별로 차등적인 패널티가 필요하다.
- ③ 인센티브를 늘리되, 목표 달성 단계별로 차등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④ 인센티브를 늘리되, 추가달성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⑤ 기 타 (_____)

22. 목표관리제를 향후 의무보고제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① 목표관리제 각종 보고서(명세서, 이행계획서 등) 작성 지원
- ②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개발 R&D 지원
- ③ 사업장 목표관리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 ④ 외부 전문가 파견 지원
- ⑤ 시설 투자비 세제 지원
- ⑥ 시설 투자비 융자 시 금리 인하
- ⑦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R&D) 지원
- ⑧ 기타()

23. 목표관리제를 향후 의무보고제로 전환할 때 미보고 또는 불성실 보고서 **패널티**를 부여한다면 패널티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수준의 패널티 유지
- ② 현재보다 강화
- ③ 현재보다 약화

24. 현행 목표관리제도 대상을 확대한다면 어떠한 기관/부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민간/상업용 건물
- ② 민간/상업용 차
- ③ 소규모 산업체
- ④ 대규모 주거단지(아파트단지 등)
- ⑤ 확대할 필요가 없다.

25. 현재 목표관리제 대상이 아닌 기관이나 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현재의 미시행 대상 모두에 확대
- ② 현행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현재의 미시행 대상 모두에 확대
- ③ 현행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건물과 차에 대해서만 확대
- ④ 현행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소규모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서만 확대
- ⑤ 배출권 거래제 미참여 업체 모두에 대해 감축목표 없이 의무보고제도로 전환
- ⑥ 감축목표 없이 의무 보고제로 전환하되, 시행대상을 민간부문의 건물과 차에 대해서만 확대
- ⑦ 감축목표 없이 의무 보고제로 전환하되, 시행대상을 소규모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서만 확대
- ⑧ 기타()

VI. 응답기관의 기본정보

26. 귀 기관은 어느 범주에 포함됩니까?

- ① 중앙행정기관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③ 기초지방자치단체 ④ 시도 교육청 ⑤ 공공기관
- 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⑦ 국립 대학 병원 ⑧ 국립/공립 대학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서 대상 분류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말한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관리공단, 경기관광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을 말한다.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국립(서울)대학병원을 말한다. 강원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릉대학교치과병원 등이 포함된다.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을 말한다. 강원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27. 귀 기관의 지난 3년간 평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00 tCO₂eq. 미만
- ② 500 tCO₂eq. 이상 ~ 1,000 tCO₂eq. 미만
- ③ 1,000 tCO₂eq. 이상 ~ 5,000 tCO₂eq. 미만
- ④ 5,000 tCO₂eq. 이상 ~ 10,000 tCO₂eq. 미만
- ⑤ 10,000 tCO₂eq. 이상

28. 귀하께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업무를 맡아서 수행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 ④ 1년 6개월 이상 ~ 2년 미만
- ⑤ 2년 이상

29. 귀하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업무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총 얼마인가요?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 ⑤ 3년 이상

* 모바일 상품권 발송을 위한 설문 응답자 핸드폰 정보 기재 요청

(설문에 응답하여 주신 분들께 모바일 상품권 5,000원 권을 보내드립니다. 귀하의 핸드폰 번호는 연구윤리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합니다.)

(H.P: _____)

※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